

# 광주 군공항 이전, 역대 정권 못 푼 현안 이 대통령이 풀었다

정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6자 협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합의  
무안에 ‘호남지방항공청’·국가산단·KTX 연결 ‘통합 패키지’ 지원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서 제기된 현안 합의 이뤄 뜻깊은 성과”

광주·전남의 숙원이었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관련기사 2·3면>  
정부가 주도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방안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고,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는 획기적인 정부 지원안이 담겨 주목된다. 명실상부한 국제사업으로 공항이전이 추진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골자로 하는 공동 발표문을 서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지자체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구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행을 보증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안공항의 위상 강화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재 부산·제주·서울에만 있는 지방항공청을 호남권에도 신설하기로 했다.

‘호남지방항공청’이 무안에 들어서면 항공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진다.  
아울러 공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공항 명칭을 한국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군의 결단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통합 패키지’ 지원책을 확정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비로 총 1조원을 조성한다. 광주시가 자체 조달하는 재원에 정부의 정책 지원을 더해 자금을 마련한다. 이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을 무안군이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굵직한 국책 사업도 무안에

집중된다. 정부와 전남도는 무안군에 ‘국가 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항공 MRO(정비) 센터 조성 등 첨단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무안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해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민간공항이 이전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하는 2027년까지 무안 이전 부지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국비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많은 갈등과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하던 문제가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 있기에 오늘의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의 노력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답을 찾아낸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충돌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 나간 이번 경험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항이전 6자협의체 당사자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 도시가 될 것이고, 광주는 군 공항이 떠난 자리에 ‘광주형 실리론밸리’를 조성해 서남권 발전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공항이 세계적인 관문 공항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대응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정부와 광주시가 약속한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과 지역 발전 지원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면 군민들을 설득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 6자협의체회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안구백 국방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통령실·전남도, 통합대 국립의대 2027년 개교 추진

정원 100명 이상 배정

대통령실이 전남 국립의대 2027년도 개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은 순천대 총장이 만나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개교에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전남도가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김 정책실장 측에 회의 종료 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김 실장은 김 지사뿐만 아니라, 양 대학 총장의 참석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의료 격

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달 안에 승인될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의 통합을 통해 2027년 통합대학의 의대 개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 국립의대에 최소 100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500명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안에도 참석자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심사 중인 대학 통합방식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대학은 현재 캠퍼스별 총장을 두는 ‘유연한 통합’ 모델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심사위는 18일 9차 심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두

대학의 통합 결정을 앞둔 마지막 심사로 알려졌다. 통합 교명으로는 ‘전라국립대’·‘전남국립연합대’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아울러 2027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 공급추계위원회’는 오는 22일 11차 회의를 열어, 이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원 배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대학 설립이 국내 첫 ‘글로벌대학 통합’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 지역혁신중심 거점국립대로 도약하도록 정부의 체계적 육성 등과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도록 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전남도는 대통령실과 함께 국정과제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이 대통령 “대왕고래, 생산원가도 계산 안 해봤나”

석유공사 업무보고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사업의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를 통

해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최문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 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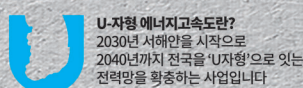
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공사가 자산 20조원, 부채 21조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불량자산이라는 점) 반영돼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 줄의 해답, 대한민국을 잇다!

대한민국 미래에너지를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국전력이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1.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에너지 : 재생에너지
2.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 : 지역균형발전
3. 멀리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술 : 초고압직류송전
4. AI시대 핵심 국가첨단산업 중 하나 : 반도체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